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2. 1. 24.(월)

■ (언론 동향) 2022.1.21. "농민신문" 기고

○ 농지 보전 · 취약층 먹거리 지원 늘려야



황윤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급격한 경제발전과 산업화, 과학기술 발달은 우리 사회에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다.

최근 먹거리문제는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빈곤층은 충분한 먹거리에 접근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영양가 높은 양질 먹거리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개인 범주를 벗어난 먹거리문제가 국가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 역할 확대가 필요해졌다. 포용·안정 가치를 중시하는 시대에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먹거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먹거리 보장' 개념은 앞으로 먹거리정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다.

국민 먹거리 보장을 위해서는 우선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기상이변에 따른 주기적인 국제곡물 수급 불안과 국내 생산 변동에다 코로나19로 식량위기 발생 우려마저 커지면서 식량안보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국가 식량안보 역량을 보여주는 기본 지표인 식량자급률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다. 특히 완전 자급이 가능한 쌀을 제외하면 밀·옥수수·콩 자급률(사료용 제외)은 2020년 기준 각각 0.8%·3.6%·30.4%에 불과하다.

식량자급률을 높이려면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농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현재 식량자급률 수준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감안해 적정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농지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량농지 보전, 농지정보 체계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 관리, 농지 임대차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식량계획은 기존 먹거리정책 계획과 달리 식량안보 강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국민 먹거리 접근성 보장 증시,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간 연계·협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식량계획 수립·추진을 정규화하는 법적·제도적 뒷받침도 필수적이다.